

사 전 토 론 문

공공 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 정책

박진우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여러 선생님들의 귀중한 발표 원고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방송 아카이브의 제도적 구축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오랫동안 기울여 오신 노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게 되었고, 또 그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등의 사례에 대한 매우 오랜 시간에 걸친 구체적인 탐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적으로 고민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그동안 국내에서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성취하지 못한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언론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아카이브 문제에 대해 그동안 매우 실천적인 어려움을 느껴왔던 편입니다. 언론 연구자로서, 과거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검색하기 위해 네이버 뉴스를 뒤져야 하는 현실은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뉴스의 아카이브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나마 기울여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구축하고 있는 <카인즈> 검색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연구자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되었지만, 그것 또한 오랜 세월 많은 곡절을 겪은 것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시대, 더구나 이른바 스마트·빅데이터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조금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토론문의 형태로 말씀드릴 내용 역시 이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저는 이번 발표문들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아카이빙이 되어야 할 여러 가지 자료들의 범주와 목록이 굉장히 폭넓게 설정되어 있는 점에 주목합니다. 적어도 이제 아카이빙이 단순히 과거의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디지털화된) 신문 뉴스에 머무르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대목으로 여겨집니다. 그랬을 경우, 아카이브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집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설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신문이나 방송, 혹은 영화나 기타 매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들을 가장 적절한 형태로 아카이빙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고민을 진척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관점들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공동의 틀은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방송 아카이브에 관한 프랑스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저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가장 중

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재원의 마련(수신료 배분 문제), 제도적 주체(주관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이들이 주도하는 구체적인 관리 시스템의 확립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이나 뉴스를 포함한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제도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아카이빙 문제의 현실적 고민도 함께 풀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사례들을 통해 아카이브의 미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